
중도우파와 아르헨티나의 문화변동

가브리엘 보마로

사회학박사, 헤네랄 사르미엔토 국립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 교수

원제와 출처: Gabriel Vommaro, “La centroderecha y el «cambio cultural» argentino”,
Nueva Sociedad, No. 270, julio-agosto de 2017, pp.4-13.

핵심어: 문화변동,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공화주의제안당(PRO), 아르헨티나

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바꾸자(캄비에모스: Cambiemos)’ 연합의 승리는 그때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소위 “좌파의 회귀”(꽤 특수한 역학이 계속된 칠레를 제외하고) 이후 선거를 통해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 정부로의 유일한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즉 진보적 정부들이 다수의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사례는 우리로 하여금 막바지에 이른 한 시대(21세기의 첫 15년간)와 그 시대의 유산에 대한 문제들을 더욱 긴 호흡에서 생각하게끔 한다. 한편으로, 분열된 선거를 통해 등장한 시장친화적 정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부는 민주

사회의 요구와 저항에 맞서면서 동시에 공공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일정한 사회경제적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그 계획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간의 긴장을 직면해야 한다. 그런 긴장은 진보주의적 시대의 정부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변화는 예전 시대의 유산이 어떤 것들인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미 준비된 문화적 합의와 재분배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훨씬 수월하게 제거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유산은 어떤 것들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는 것 외에 본 논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우파 국가들과 구별되는 아르헨티나 사례의 특수성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례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제도화하고 경쟁력 있는 우익 진영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바꾸자’ 연합에서 주도권을 가진 세력인 공화주의제안당(Propuesta Republicana: PRO)이¹⁾ 전국적 차원의 정당을 설립하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공간을 견고히 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마크리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점검할 시점에 있으며,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글의 목적이다.

1) 급진당(Unión Cívica Radical: UCR)과 국가연대당(Frente por un País Solidario: Frepaso)을 포함한 연합 정부에서 1999년에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바꾸자’ 정부에서는 특히 내각구성 시 연합의 논리보다 같은 편이 통제하는 것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장관과 공사(公使) 대다수가 공화주의제안당 및 당의 조직 출신이기 때문이다. 장관직이 23개인 이 내각에 급진당 출신 장관은 3명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당의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의 선호에 의해 선출되었다.

점진주의(gradualismo) 방법²⁾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³⁾ 공화주의제안당은 경영의 현대화라는 사회문화적·경제적 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공화주의제안당은 자원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중심역할을 간과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비판했고, 특히 몇몇 사회적 권리의 보호를 언급하였다. 공화주의제안당은 이 점을 취약 분파에 대한 보살핌과 연관시킨다. 특히 키르츠네르주의 시대의 마지막 몇 년간, 공화주의제안당은 스스로를 명백한 야권세력이라고 밝혔고 공화-자유주의 정치라는 민주주의 개념 수호, 정부의 부패 고발, 경영의 현대화를 당 정치 강령의 중심요소로 통합하였다.

동시에, 공화주의제안당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정당의 정치적 계획을 수행하고자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지닌 탈 이데올로기적 정당이라고 여겼다. 이 당은 아르헨티나 사회 및 경제로부터의 저항에 대해 명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대다수의 경제개방정책, 시장규제의 유연화 정책, 보편적 복지(퇴직연금,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에 대한 공공투자 삭감정책을 지지한다. 그 결과, 공화주의제안당 지도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경제 유형은 소위 정통 경제학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공화주의제안당의 실용주의적 노선과 진정한 여당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쇼크 요법보다 점진주의를 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선택이 정통 경제

2) 점진주의(gradualismo)는 19세기 생물학에서 진화방식을 논할 때 사용된 용어인데 경제학자 마샬은 이를 경제학에 적용해 경제적 변화는, 미시적인 것이 변화하면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할 때 사용하였다(역주).

3) G. Vommaro, Sergio Morresi y Alejandro Bellotti: *Mundo PRO. Anatomía de un partido fabricado para ganar*, Planeta, Buenos Aires, 2015.

학자들에게 훌륭한 모듈로 키르츠네르주의를” 실행한다고 비판받는 것이다.⁴⁾

이런 실용적 성향은, 정당을 통제하고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분파들이 공유한다. 대기업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에 편입하는 것은 쇼크 요법 쪽으로 기울지 않고 실용적인 노선과 일치하는 행위다. 이 말인즉슨, 전문가들이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인터뷰 대상자였던 공무원의 말대로, 대기업 출신 최고경영자들이 전문가로서 갖는 권위는 일의 내용이 전문가의 업무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과 연관된다. 이와 반대로, 그 권위는 CEO 대다수도, 정통경제학자도 없는 “작은 테이블”에 계속해서 정치적 수칙을 제공한다. 내각 지도부는 공공정책의 진척을 관리하고 새 정부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하는 핵심인데, 이 지도부는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실용적인 정책관리와 고도의 경영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정치적 내각의 수장 마크리 옆에는 대기업 출신으로 “각 부처 간 조정(coordinación interministerial)”⁵⁾과 “공공정책 조정(coordinación de políticas públicas)”을 담당하는 두 명의 CEO 출신 장관이 있다. 정권 초반에 정부로 편입

4) 이는 정통경제학자-대중적 인지도가 있는-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José Luis Espert)가 2016년 매스컴에서 행한 여러 개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를 다음 사이트에서 청취할 수 있다.

<https://radiomitre.cienradios.com/jose-luis-espert-cambiamos-es-como-el-kirchnerismo-con-buenos-modales/>
당의 초창기에, 공화주의제안당 내에서 정치적 용어를 빌면 가장 강경한 노선 중 하나는 특히 1980년대 중도우파 성향의 주요정당이었던 중도민주연합(Unión del Centro Democrático: Ucedé)과 메넨주의적 페론주의의 후신(後身)인데 이 노선은 정책에 따른 안에 대해 매우 단정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G. Vommaro y S. Morresi (eds.): «Hagamos equipo». PRO y la construcción de la nueva derecha en Argentina, Ediciones ungs, Buenos Aires, 2015.

5) 부처 간 조정부(Secretaría de Coordinación Interministerial)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부서의 기능은 “빈곤 제로, 아르헨티나 국민의 단결, 마약대량거래 퇴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들과 내각 수장 간의 관계(las relaciones entre los ministros y el jefe de Gabinete para alcanzar los objetivos de pobreza cero, unidad de los argentinos y lucha contra el narcotráfico)”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위 세 가지 목표는 2015년 12월 마크리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되는 최대의 특혜를 받은 경제학자들은, 점진주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결정에 일말의 자율성을 원해서였는지, 2016년 말 그 특혜를 포기했다. 그 후 정책의 향방에 대한 결정은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새로운 집권 여당이 상원이나 하원, 그리고 24개 지방정부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다른 정치세력과 교섭 및 협의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정치적-제도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일종의 점진주의에 우호적이다. ‘바꾸자’는 키르츠네르주의에서 가장 먼 페론주의의 궤에서 특히 협조적인 그룹을 만났다.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 정상화를 추구하는 정부

경제와 관련해 ‘바꾸자’ 정부는 자신이 사회와 경제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세력임을 자처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치 주기의 “포퓰리즘적 변칙” 이후 아르헨티나에 “세계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천천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상에서, 정부가 취한 처음 두 가지 조치는 경제적인 조치였다. 하나는 곡물수출관세 인하를 통해 농산물수출 부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부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들로 인해 국고수입은 감소했고, 동시에 금융시장이 성장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처음에 진단했을 때, 지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의 성장 동력이었던 소비의 역할과 공공투자를 대체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정상화로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민간투자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발전에 대한 진단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래서 정상화는 하나의 행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사회가 그런 신흥국가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할 “다리”에 대한 은유는 차고 넘친다. 특히 공식 및 비공식 노동자로 조직된 단체와 기업가 단체에서도 그런 비유들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바꾸자’ 정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치적 전통에 자신의 뿌리를 침전시킨다. ‘바꾸자’ 정부는 민주주의 과도기 때처럼 아르헨티나를 한 정치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전환시켰고, 그러기 위해 정치·문화적 의미에서 “문화변동”이 필요했다. 이렇게 한 유형의 사회에서 다른 유형의 사회로의 이행은 아르헨티나 국민을 내적 발전에서 외부로의 개방으로, 소비 사회에서 투자사회로 이끄는 “문화변동”이 필수적이다. 이는 60년대와 7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시행된 경제 재건설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점이 적지 않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경제 재건설 프로젝트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16년 중반부터 정부는 더욱 스스로가 글로벌 경제를 향한 느린 이행을 통솔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원하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완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OECD 가입은 아르헨티나가 정상⁶⁾ 궤도에서 다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건을 갖추으로써 정돈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화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향해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들은 재건의 수사 면에서 서로 닮았다. 즉, 모든 정부가 불가역적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새 정부는 어떤 부문에서는 덜 점진적이었다. 그 중 통화 부문에 대해 새 정부는 주요 경제이론과 글로벌 경제 동인(動因)들의 요구에 의거해 중앙

6) 멕시코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기구는 《유사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을 하나의 단체로 모은다.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향하는 한 국가의 약속에 좌우되는 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reúne a un grupo de países con ideas similares. Esencialmente, el ser miembro de la organización depende del compromiso de un país hacia la economía de mercado y la democracia pluralista)》. <[www.oecd.org/centrodemexico/laocde/masinformacionsobre laocde.htm](http://www.oecd.org/centrodemexico/laocde/masinformacionsobre%20laocde.htm)>를 참조할 것.

은행 회장직을 가장 정통적인 분파들에게 주었다. 이들은 거의 유일한 목표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단행했는데, 화폐 발행을 막고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이는 한편으로 적어도 비금융 분야에서나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민간투자를 막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로 하여금 채무를 잡음으로써 공공지출 자금을 덜 방안을 찾게끔 한다. 사실상 채무 증가 속도는 2016년 한 해 동안 가속화하였다. 이 경향은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바꾸자’ 정부가 사회분쟁의 증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미래의 경제정책을 위한 새로운 여건을 만든다. 이 글의 목적이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은 전반적인 경제의 방향이 정부의 상황과 그리고 이를 통솔하는 정치세력 중심부에 있는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동안에 키르츠네르주의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 저 넘어... ‘바꾸자’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2015년 12월 9일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Cristina Kirchner) 전직 대통령이 5월 광장에서 이별을 고하면서 “권력을 얻은 민중”에 대한 이미지도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키르츠네르 정부 시절에 제정된 권리 확대 정책들로 인해 영속될 것 같았던 국가적, 민중적 유산을 ‘바꾸자’ 정부는 집권 초기 몇 달 동안에 모든 것을 동원해 끌어버린다는 인상을 주었다. 사실 2차 투표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간발의 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⁷⁾ 새로운 정부는 앞서 다룬 아르헨티나의 정상화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정상화의 주요 특징은 상당 부분 키르츠

7) 2015년 10월 25일에 있었던 1차 투표에서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는 37.08%의 표를, ‘바꾸자(Cambiamos)’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는 34.15%를 득표했다. 2015년 11월 22일에 실시된 2차 투표에서는 마크리가 51.34%로 우위를 점했고, 시올리는 48.66%의 표를 얻음으로써 2위에 머물렀다.

네르주의가 2003년부터 건설하려고 투쟁한, 그리고 2008년부터 더욱 명료한 윤곽을 나타낸 사회 유형과 반대된다.

“문화변동”이라는 용어에 담긴 이런 단절을 정의하는 것은, 추구되는 변화의 범위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그 도달점을 부정확하게 만든다. 정상화를 추구하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아르헨티나의 문화, 즉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일을 진척시키는 방식,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와 연결된 활동을 하는 아르헨티나인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⁸⁾ 이 변화는 국가 중심적이고 전투적인 기풍이 또 다른 진취적이고도 자유재량과 관련된 기풍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에 대한 공공의 강박관념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변동”은 계속 그렇게 막연하다. 그렇지만 경제, 재정, 노동, 정치, 문화의 개혁을 모두 같은 틀에 우겨넣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키르츠네르주의가 만들어낸 합법적으로 공유되는 집단적 재산(무엇보다도 국유사업인 보편적 아동수당(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⁹⁾의 상당부분을 수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어조는 명백히 재건설적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바꾸었는가?

첫째, ‘바꾸자’는 성공적으로 대중사회조직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것 같다. ‘바꾸자’는 이전 정치 주기에서 더욱 공고해진 비공식 조직들의 힘

8) 이는 마르틴 로드리게스(Martín Rodríguez)가 2017년 5월에 발행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남미 최남단지역 판(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Cono Sur)》 215호에 수록된 「일부 분위기(Parte del aire)」에서 시사하는 점과 비슷하다.

9) 2009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집권기에 긴급필요 대통령령(Decreto Necesidad Urgente)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 한 명당 가정에 월 수당을 지급한다. 이름과는 달리 ‘보편적’ 프로그램은 아니고 현재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에만 수당이 지급된다(역주).

을 정책적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소위 “서민 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진흥과 공공 투자는 이런 사실을 대변한다. 하지만 거리의 질서를 위해 아주 엄정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어려워졌다. 공공 재산을 통한 복지를 요구하는 대중의 시위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그 예이다.

둘째, 지금까지 공식부문 조직들, 즉 노동조합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간단치 않았다. 단체행동이라는 방법적인 면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교섭자이지만 온건한 요구사항과 이데올로기적 유연함을 가진 거대 노동조합들은 구조조정이 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거대 노동조합들은 “분절된 신(新)조합주의” 논리를 따랐는데, 키르츠네르주의 시대¹⁰⁾에 이미 시행된 “분절된 신(新)조합주의”는 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직접 대변하는 분파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고 미등록노동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는 극히 작은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노동조합들은 가난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일부 서민계급의 대변인으로 여기며 그들을 다양한 교섭 테이블과 국가상황 및 행동방식에 대한 평가 테이블에 합류시켰다.¹¹⁾ 전대미문의 공식·비공식 노동자들의 단결은 시대적 혁신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단결은 국가적, 민중적 유산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 비록 정치적 대안이 불분명할지라도 공식 부문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 어느 쪽도 “문화변동”을 향한 복지에의 참여를 단념할 용의는 없는 것 같다.

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Sebastián Etchemendy y Ruth Berins Collier: «Golpeados pero de pie. Resurgimiento sindical y neocorporativismo segmentado en Argentina (2003–2007)» en *Postdata* N° 13, 6/2008.

11) 예를 들어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La CGT y los movimientos sociales acordaron unir sus reclamos contra el Gobierno» en *La Nación*, 7/9/2016.

인권에 대한 정책들, 특히 마지막 군부독재시절 국가테러리즘의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 관련 합의도 지속성을 띠는 것 같다. 실종자 3만 명 같은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숫자들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친(親)정부 공무원과 지식인의 시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새 정부가 임명한 법관 두 명의 지지를 동원하여 인권침해 범죄를 자행해 유죄선고를 받은 주범자들의 형량에 혜택을 제공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엄청난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국회는 그런 적용을 금하는 법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침해 범죄에 “2×1”¹²⁾ 적용을 허용치 않는 법안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꾸자’ 진영을 포함해 국회 거의 모든 진영의 지지를 얻었다. 얼마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키르츠네르의 승리를 위한 전선(FPV)은 ‘바꾸자’ 진영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에서 “민간-군부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끔 하는 법안을 승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정권 후반 몇 년 동안에 공식적인 기억을 바로잡은 것과 일치한다. 인권에 대한 정책은 현재까지는 문화변동의 일부가 될 수 없었고, 차이는 다소 있으나 민주주의 초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파의 이익에 사로잡힌 정책으로 보는 시선에 반해, 인권에 대한 정책은 키르츠네르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인지 여부를 초월해 아르헨티나 사회를 가로지르는 합의다.¹³⁾

반면, 이전 정치적 주기의 문화정책, 그 중에서도 매스컴과 연관된 문화정책은 지속성이 덜했다. 사실 ‘바꾸자’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키르츠네르주의 시절에 승인된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일명 미디어법)과 원거리통신법에 의해 창설된 규제기관 두 곳이 각령에 의해 해산되었다. 두 기관이

12) 복역기간을 2배로 계산해 보호감호처분에 처하자는 내용의 법(역주).

13) 이 지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해 집결한 열기에 대해 파블로 세만(Pablo Semán)이 작성한 논설을 참조하였다. <Derechos humanos, contingencia y sobregiro> en *Panamá Revista*, 11/5/2017.

란 바로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연방당국(Autoridad Federal de Servicios de Comunicación Audiovisual: AFSCA)과 정보통신과학기술 연방당국(Autoridad Federal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AFTIC)이다.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연방당국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가, 시청각매체시장 규제를 담당했다. 이 기관은 2010년 국회에서 의결한 미디어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며, 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벌인 기나긴 토론의 결과물이었다. 이 기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디어의 소유권을 분산시켜서 시청각 영역을 민간, 정부, 시민사회에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키르츠네르주의 정부와 멀티미디어 그룹 클라린(Clarín)이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된 목표는 그 목표의 원래 정신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 입법절차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령의 탄압은 이전 정책의 부족한 점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그 대신 국가통신기관(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국회의 소수파를 대변하지 않았으며, 이 영역에서 행정부가 중요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화의 깃발은 즉시 버려졌고, 대신 매스컴의 집중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요 관심사가 과학기술의 현대화, 시장경쟁의 확대로 변하기 시작했다.¹⁴⁾ 결국 이 “문화변동”이 정상화의 길을 계속한 것은 통신 부문이다. 여기서 정상화란 대외경쟁에 대해 규정에 의거해 개방하고, 독점적 집중 반대 조례를 상당부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르헨티나에 전국적인 우파정당이 생길 것인가?

‘바꾸자’ 정부가 정치적으로 취약한 것은 ‘바꾸자’ 연합의 주요세력이 전국에 불

14) Ver Martín Becerra: «Restauración: cambios en las políticas de comunicación» en *Épocas* N°2, 2016.

균형적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창립한 공화주의 제안당은 처음부터 다양한 시기를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은 한 지방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들에서도 존재감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화주의제안당은 “변화를 위한 약속”(Compromiso para el Cambio)에서 공화주의제안당으로 넘어가면서¹⁵⁾ 과거 재창조당(Recrear)¹⁶⁾이 정착시켜놓은 것을 활용하면서 마침내 전국적인 정당이 되었다. 그 지지기반의 상당부분은 자유주의 정당,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보수적 정당, 급진주의 우익정당의 오랜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공화주의제안당은 ‘바꾸자’의 흔적을 희석시키길 원하는 것 같지만, ‘바꾸자’와 함께 급진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도우파와 직접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 도시 중산층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키르츠네르주의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은 결집력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선거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바꾸자’의 이름하에서 공화주의제안당 지도자들은 국가의 통치와 전국적인 당의 지속적 구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듯하다. 지금은 선거가 끝나면서 완료된 정치 주기, 즉 키르츠네르 주기에 대해 위로부터 일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자원도 없이 어떻게 이전 정치 주기의 유산을 없애버릴 수 있는가?

한편, 원래 페론주의자이지만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은 주지사들과의 교섭은, 전국적인 공공정책 지국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주(州) 차원의 주요 직원 몇 명에 대한 통제를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지지 성향이 어떻건 간에 적어

15) 2005년에 창당된 아르헨티나 정당인데 2008년에 공화주의제안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역주).

16) 2002년에 창당된 우익 성향 또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당으로 원래 당 이름은 성장을 위한 재창조(Recrear para el Crecimiento)다(역주).

도 단기간 동안 정치적 자원을 각 지역의 통치 하에 유지시킨다는 의미다.¹⁷⁾ 다른 한편으로, 중앙을 넘어선 전국적 존재감이 빈약한 ‘바꾸자’ 연합 내부의 지배 정당인 공화주의제안당과, 결정권 장악 면에서는 소수파지만 전국적 존재감은 큰 가장 전통적인 정당인 급진당 간의 갈등은 ‘바꾸자’ 정부의 모순을 보여준다. 즉, “문화변동”의 매개체로 자리 잡으려면 동맹이 필요하지만 종종 이 점은 ‘바꾸자’ 정부를 자율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공화주의제안당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을 가지고 2007년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그랬듯이, 전국적 규모의 정당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지는 요원해 보인다. 엄격히 말해, 마르셀로 레이라스(Marcelo Leiras)가 주장하듯이¹⁸⁾ 아르헨티나에는 전국적인 정당이 없다. 모든 정당은 연방의 복잡성과 맞서야 하고, 지방 정부 엘리트들과의 연합으로서 더욱 잘 구성되었다. 선거에서의 승리와 인기 많은 인물들에 힘입어 공화주의제안당은 급진주의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백 년의 역사를 지닌 그 정당의 탄력성은 상당 부분 지역 수준에서 정부가 갖는 탄력성 때문인데 이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정보다. 21세기 도시 중산층 및 지방 중상위계층의 당으로 전향하자는 논쟁은 그렇게 계속 열려 있다. 여기에서 점진주의, 그리고 유산의 무게 또한 변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조혜진 옮김

17) 여러 부(部)(노동부, 사회발전부)와 공적 지국들(사회보장 국가기구(Administració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ANSES), 종합의료프로그램(Programa de Atención Médica Integral: PAMI)은 모든 주(州)에 관공서가 있다. 전통적으로, 통치세력은 각 관구에 상기 기관들을 지정하였다. 이 경우, ‘바꾸자’ 정부는 연합의 일원인 정치세력들 간에 직위를 분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주에서는 약간의 현상(*statu quo*) 유지를 받아들여야 했다.

18) M. Leiras: *Todos los caballos del rey. La integr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y el gobierno democrático de la Argentina*, Prometeo, Buenos Aires, 2007.